

“구청과 인사교류 중단” 광주시 최후통첩

“부구청장 자체 승진 강행맨 7급 이하 시 전입 등 불가”

동구청·광산구청과 갈등…市 내일께 인사 예고 방침

광주시가 최근 일부 구청에서 반발하고 있는 자치구와의 인사교류 문제에 대해 구청에 최후통첩을 했다.

광주시는 28일 ‘부구청장(3급)을 시에서 받는 대신, 자체 내부 승진’을 요구하는 일부 구청과는 자치구 7급 이하 시 전입 등 인사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시 박병호 행정부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일부 자치구가 2015년 4월 시와 체결한 인사교류 협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협약에 따르지 않는 구청은 인사교류 협약사항 이행을 중

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자치구 간 체결한 인사협약은 시에서 임명한 부구청장(3급) 파견, 자치구 7급 이하 시 전입, 사서 직렬 통합 인사 및 신규 임용합격자 시 기본교육 등이다.

하지만 최근 광주시 동구청과 광산구청이 이에 반발, 부구청장 내부 승진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인사협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날 현재 남구청, 북구청은 이에 따를 뜻을 밝혔다. 서구청은 기본 협약에 동의하지만 자체

인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동구청과 광산구청은 답신을 보내지 않은 상태다.

광주시는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일부 자치구의 의견을 이날까지 들은 뒤 늦어도 오는 28일께 인사 예고를 단행할 계획이다. 부구청장 인사교류를 거부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하위직 시 전입이나 신규 임용합격자 기본교육 등을 하지 않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 부시장은 “지난 5년간 구별로 70명 안팎 370여 명이 시로 전입했는데 자치구가 사전논의도 없이 자체 승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상생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재 광산구는 부구청장 자체 승진을 고

수하고, 동구는 공로연수 대상인 기존 부구청장의 잔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자치구는 부단체장 승진 권한은 단체장에게 있다는 지방자치법 규정 등을 들며 자체 승진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들 구청이 자체 승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4급 승진자의 승진소요 최소 연수를 ‘5년 이상’으로 규정했던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난 2012년 5월 3년 이상으로 낮춰지면서 불거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거 일선 구청 내부에 5년 이상의 최소 연수를 채울 수 있는 공무원이 거의 없었지만 최소 연수가 줄어들면서 퇴임을 앞둔 일부 구청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정부, 석해균 선장 치료비 1억6천만원 대납키로

종교인 과세안 의결도

정부가 ‘아덴만 영웅’ 석해균 선장의 밀린 치료비 1억6700만 원을 정부 예산으로 대납한다.

정부는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석 선장을 치료한 의료가기관이 받지 못한 치료비를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석 선장의 치료비는 모두 2억5500만원이었지만, 삼호주요리호의 선사인 삼호해운이 파산하는 바람에 아주대병원 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은 8800만 원을 제외한 1억67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종교 활동에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

하고,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과세 당국이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조사 등 관리·감독 실효성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자치입법권 또는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한 17개 대통령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지자체장 허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유공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 및 수당은 ▲독립유공자·유족 5% 인상 ▲국가유공자·유족 5~7% 인상 ▲4·19혁명 공로자 12만7000 원 인상 ▲무궁영예수당 8만 원 인상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5% 인상 ▲참전명예수당 8만원(22만→30만원) 인상 등이 의결됐고, 진로비 본인 부담률도 낮아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울 제2남도학숙 개관

입사생 808명 모집

재단법인 남도장학회는 서울 남도학숙의 내년도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내년 2월 문을 여는 제2남도학숙(서울 은평구) 517명과 현재 운영 중인 제1남도학숙(서울 동작구) 291명 등 모두 808명이다.

시도별로 광주 397명(남 184명, 여 213명), 전남 411명(남 190명, 여 221명)이다. 신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해당 학숙에서 받는다. 합격자 발표는 2월 6일이다.

제2남도학숙은 서울시 은평구 별관부지 5960㎡에 지상 7층 규모로 2016년 7월 착공, 최근 준공했다. 지하철 3호선 녹번역과 불광역, 6호선 역촌역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으며 강북지역 주요 대학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입사 기준도 대폭 완화해 신입생은 고교 성적을 기준으로 한 평가가 없어지고 재학생은 대학교 성적 반영 비율을 50%에서 30%로 줄였다.

가산점 대상인 사회적배려대상자 범위도 기초수급자 등 5개 분야에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아동복지시설 보호학생, 탈북민, 특별재난지역주민 등 7개 분야를 추가했다.

기숙사 재학생 성적 기준 폐지, 4년제에서 2년제 대학과 수도권 대학도 가능 등 입사 문턱을 낮췄다.

월 16만원의 저렴한 이용료와 각종 장학제도, 교육강좌 등 대학생활과 사회진출에 유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이 다니는 이 지역 출신 학생들의 요람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근혜 방문조사 무산

26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40억원에 가까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방문조사가 무산됐다.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위안부 합의때 피해자와 소통 부족”

위안부 TF 오늘 결과 발표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TF(태스크포스·이하 위안부 TF)’는 27일 약 5개월간의 검토 결과를 발표한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위안부 TF의 오대규 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검토 보고서 내용을 토대

로, 접촉 가능한 생존 피해자 전원과 피해자 지원단체, 전문가 등의 견해를 청취한 뒤 합의를 유지할지,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할지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

보고서는 우선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위와 당시 우리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소상하게 담은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는 ‘피해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혀왔지만 이번 보고서는 그런 주장을 논박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26일 “(한일간) 합의가 나오기까지 피해자와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하는 결론”이라며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결론이지만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본이 합의 후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는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문구가 합의문에 포함된 경위도 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공무원 적극 업무 수행 중 과실 징계 면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가 면제되고, 성취률에 따른 징계수위는 성폭력 범죄 수준으로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긴 과실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적극적인 행정에 따른 과실은 징계 감면을 받

을 수 있으니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안내 문구를 넣도록 했다.

한편 공무원의 성취률에 대해서는 징계수위를 높였다. 성취률 사건 가운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현재는 ‘강등~감봉’의 징계가 이뤄지지만, 이를 ‘강등~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한 것이다. 성폭력 범죄 수준으로 징계수위를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다. 인사처는 “공직사회가 성취를 없는 직장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위작 제작·유통 땀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위작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작 상습범은 3배까지 중벌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미술품 유통·감정 법률안’은 지난해부터 이루어진·전경자 파문 등의 위작 논란이 이어지면서 위작

유통 근절과 시장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위작 미술품을 제작·유통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계약서나 보증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자 또는 허위감정서를 발급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그동안 미술품 위작은 사기나 사서명 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앞으로는 위작죄로 처벌된다는 데 이번 법안의 의미가 있다.

/연합뉴스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연수원 · 요양병원
변경 가능 호텔**

- 구례 산동 운전지구, 4층, 대형 모델
- 대 573평, 건 683평, 객실 58개
- 전체 물수리, 연3억 이상 순수익가능
- 매 18억, 주인직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가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배속삭~~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90% 융자지원사업 / 선택순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평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